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교육정책의 방향¹⁾ -청소년의 성적 실천과 제도화 사이에서

변 혜 정

충북 여성정책관

= Abstract =

The Vision and Method of Policies on Gender Sensitive Sexuality Education for Health Promotion of Youth

Hea Joung Byun

Bureau of Women's Policy

Objectives: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some of necessary contents in youth gender sensitive sexuality education to be enforced as a policy, and to suggest vision and methods to may be adopted in the future gender sensitive sexuality education.

Methods: This has been done by an analysis from references about sexual education and related data of ngo/go.

Results: Rather than teaching sexual standards to youth by referencing model developed by adult or adult oriented/required sex education, the researcher has proposed diversified sexual right education, which 1) raise an ability of youth to negotiate relationship between adults and youth, such as age, sexual (gender) standard, sexuality, etc. and 2) raise an ability of the society to recognize desires and growth of modern youth. The most appropriate education system for youth is all about how to make youth expose and practice their desire to themselves and to others. This can promote youth health through understanding the close relations among people and the power relationship.

Conclusions: This research, rather than being protective measure for youth, or being preparatory education for exchanging knowledge, information and experience on standard means of conducting sexual relationship or sexual activities, proposes a transfer to sexual citizenship that promotes establishment of new relationships. Beyond the idea of personal sexual rights, the sexual citizenship education system requires systematic support and political discussion for recognizing sexual conducts, identity, relationship. This is to recognize the reality and the power of youth for healthy life.

Key Words: gender sensitive sexuality education, health promotion, sexual citizenship, customized education and embodiment, empowerment, making policy suitable for youth

※본 연구는 서울시 늘푸른지원센터에서 개최한<심대를 위한 성
인지정책은 가능한가>라는 포럼(2007)에서 발표한 초안을 근거로
청소년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재구성함.

교신저자: 변혜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여성정책관실, 충북 여성정책관

전화번호: 043-220-3910, 팩스번호: 043-220-3919

E-mail: gender518@korea.kr

서 론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언제나,
누구나 알고 있다. 또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틈새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어른²⁾들은 인터넷, 야동, 드라마, 만화 등 ‘건전하지 않은’ 성적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금지로만 대응한다. 또한 10대의 임신 방지³⁾ 또는 순결교육을 전제로 낙태, 에이즈의 위험이 경고된다.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이중규범을 근거로 때로는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성장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교육의 방향,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정책화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대해 걱정만 할 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성을 경험하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인지 성교육이 한국사회에 등장한지 몇 십 년이지났는데도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성교육(정책)을 키워드로 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 학술정보에 탑재되어있는 논문이외의 각 부처의 성교육에 대한 정책 계획과 업무가 청소년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성교육은 양성평등관점에서 지자체의 여성정책 관련교육프로그램, 학교성교육의 의지와 필요성을 느낀 소수의 학교 선생님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학교 밖의 여성/청소년 단체나 성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성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습효과와 학업성취수준의 향상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교과별, 과외 활동을 통해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을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통합적 성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정책은 명시적 측면과 잠재적 측면이 존재

한다. 따라서 성교육 정책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왜 그런지를 분석해야 한다. 정책 목적, 형성과정과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성교육을 전제하고 직접 대상집단(target group) 청소년들의 필요(need)가 충족되었는지, 그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위해 성교육 실행주체들의 청소년 성에 대한 입장을 조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글은 청소년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이라는 측면에서 변화하는 청소년의 성장과 세력화에 토대를 둔 성교육의 필요성과 비전 아래 한국사회의 성교육정책의 간단한 현황과 함께 공식적 위치를 점검할 것이다. 특히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건강이란 신체적, 감정적인 안녕을 추구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술적인 행위로 당연한 인간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질병들이 원인을 모르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변형이 가능한 생활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생활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Ahn, 2013:6-7). 이러한 건강증진방법을 근거로 신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적 성적실천을 근거로 성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감정/심리/사회적 건강증진은 이제까지의 청소년의 성적 실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임, 성폭력예방 뿐 아니라 성적결정권 등의 청소년 성교육정책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성교육정책과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성교육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 정책 변화와 주체들의 딜레마

1.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보호’정책

한국사회에서 성교육은 다양하게 그 의미가 사용되고 있지만 ‘성인’인 어른들이 ‘성인이 아닌’ 십대 청소년

2) 이 글에서의 어른은 청소년이 아닌 자들로서 정책입안자, 교사, 부모,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전제되는 연장자 이상의 의미이다. 특히 어른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보다 가르침의 방향, 담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력(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선택했다.

3) 최근 10대 임신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다. 저출산과 맞물려 10대 임신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다. ‘취를 잡자’라는 소설 소개에 대한 www.ohmynews.com 참고

들에게 성에 관한 말과 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에서 개인, 몸, 문화 등의 미시적인 영역으로 관심들이 옮겨가면서 성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들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성별(gender), 성역할, 섹슈얼리티, 성정체성, 성적 의사결정능력 등 생물학적 지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성관련 개념 및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학술적으로 또는 문화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폭력의 이름으로 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나 그들이 주체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십대 임신과 출산, 미혼모, 원조교제, 성매매, 가출시의 성, 폭력적인 성 등의 청소년들과 관련 되서는 안 되는, 성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건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십대들이 성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야 한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들은 페미니즘, 여성운동 그리고 약자를 위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영향과 함께 청소년들의 성에 관련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부-비정부 양쪽의 기구들을 탄생시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한국의 성교육(정책)방향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폭력과 위협의 성이 강조되면서 과거처럼 성을 저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방교육이 강조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앙부처나 교육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하나로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된다. 다른 하나는 성적결정권 등의 청소년들의 몸과 성에 대한 관심 추구와 다양한 체험교육이다. 각각의 입장과 그 내용 그리고 어려움을 정책실시 주체들이나 관련자의 맥락에서 분석해보자.

1983년 당시 문교부의 교사용 성교육 지도서인 인간의 성장 발달에 관한 공식적인 성교육(박효정, 2001)

4) 이후 6차⁵⁾ 교육과정운영지침에서 성교육은 관련교

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를 명시했다. 특히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⁶⁾ 이후, 여성의 순결교육 등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7차 교육과정⁶⁾에서는 재량 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에서의 범교과 학습에서 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성교육이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된 것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성교육 활성을 위한 2000년 학교성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계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간의 체계적인 연계 틀 속에서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현장의 성교육 담당교사 또는 관련교과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배정철, 2002)⁷⁾.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 기존의 성교육 지도 자료를 보완하여 초·중·고등 학생을 위한 성교육교사용지도서,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와 함께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책자와 CD를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 성교육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으며, 성교육담당교사를 중심으로 방학 중 연수교육 실시 등의 학교성교육의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교사용 성교육홈페이지(<http://www.edugender.or.kr>)를 운영하여 성교육자료(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웹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및 학생, 학생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한다.

특히 2001년 이후 학교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내고 지도지침에 따른 이행실태를 매

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성에 대한 언급을 남녀같이 배울 수 있으며 교사의 의지에 따라 수업시간 내에서도 성교육을 할 수 있다(변혜정, 한겨레 신문, 야 한국사회 컬럼, “자위와 처녀막” 참고).

6) 제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00년 중학교 2001년 고등학교 2002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종전까지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수시개정 체제로 바꾼 뒤 8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된다.

7) 배정철(2002), “학교성교육의 방향”, www.edugender.or.kr

4) 박효정(2002), “학교성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www.edugender.or.kr

5) 1995년 제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남녀학생에게 가정 및 기술, 산업 교과를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성교육에 있어서의 큰 결실이다. 생물학적인 지식과 정보차원의 교육이

년 말 집계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학교별 성교육 연간계획서 수립과 담당교사지정(1교 1명, 업무 분장 표에 명시), 필수시수 확보권장(실시학년별 10시간 내외), 성교육예산확보, 담당교사연수 및 연구학교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원외, 2005). 일단 일선의 학교들은 이러한 지침 마련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갖게 된다. 또한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들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2시간 성매매예방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학습 10시간 외 성교육은 13시간이 가능하다(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일수 205일에 국/영/수 등의 중요과목은 1년에 주당 4~5시간, 음악 등의 선택과목은 3년 총합하여 주당 5시간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이어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경험 연구⁸⁾를 수행한다. 이는 여성교육 정책연구과제로 전국 16개 시도, 53개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5,153명과 성교육 담당교사 48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주체성 형성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 효과적인 성교육 시행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보완, 성교육 시간의 실제적인 확보, 성교육담당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Oh, 2005).

그러나 성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정책의 하나로서 실행되다가 2005년 9월 학교폭력대책팀으로 그 업무가

이전되어 ‘폭력’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그 당시 성인, 대학생 대상의 성교육은 여전히 여성정책과, 평생교육과에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성교육이 폭력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 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업무(2004)는 “여성교육정책 관련정책의 수립조정/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양성평등교육의 증진/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계획의 수립”으로 구분되어 있다(Lee, et al. 2005). 반면 시/도 교육청에서의 여성교육정책 중점사항은 행정직 여성진출/여학생 진로직업교육/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교사의 성인지 능력신장/교육과정의 양성평등/학교 성교육 강화(경남, 전북, 제주지역의 경우 학교성교육 및 성희롱에 방체계 강화)로, 학교성교육강화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사업내용도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확산/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양성평등성 강화/여학생 진로교육/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교원의 양성평등의식연수강화/여학생 편의시설 확대 및 여교원의 복지증진/교육행정직으로의 여교원 진출확대로,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라는 업무가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부산 인천 등의 학교 성교육 사업에서 발견된다⁹⁾.

2005년 9월 이전 성교육은 1) 교육관련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성교육이라는 업무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2) 주로 여성교육정책에서 양성평등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에서의 정책중점사항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성교

8)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교육정책 연구과제보고서 2004-03을 발행했으며 2006년 오재림은 “성교육프로그램의 현주소와 대안찾기”라는 글에서 학교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오재림의 논문에서도 드러났듯이 2004년 연구결과를 수용, 비판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9) 2003~4년도 교육자치단체의 여성교육정책 사업현황 중에서 성(교육)관련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재구성해보니(이 상원 외 연구(2005) 부록 190~209쪽 참고) 시/도교육청에서의 정책중점사항은 1)행정직 여성진출 2)여학생진로직업교육 3)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 4)교사의 성인지능력신장 5)교육과정의 양성평등 6)학교성교육강화 7)기타의 7가지이다.

육을 중점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정책 중에서 학교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2002년의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여성교육관련정책과제가 2003~2007년의 2차 기본계획에서는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예방체계 강화를 추가함으로써 성관련교육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의 여성교육관련 강의현황을 살펴보다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외에 인간 발달과 성의 이해, 성심리와 이성교제, 성의학과 약물오남용, 성상담이론과 실제, 성가치관 교육, 생활지도, 성문화와 성의식, 성교육수업의 실제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양성평등과 성가치교육, 이성관계교육, 성의학지식 등이 주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성교육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문강사나 정책입안자의 관점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교육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5년 9월 이후 한 명의 담당자가 학교폭력이라는 범주에서 성교육을 다루게 되면 폭력예방교육 이상을 할 수 없다. 여성정책업무로만 다룰 수 없는, 학교현장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담당부서의 변화는 의미가 있으나 여성정책업무와 비교했을 때 성교육 내용을 확대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폭력 중의 하나로서 성폭력을 다룸으로 성인지적 감수성을 교육하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폭력예방만이 성교육이 아니며 폭력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그 내용은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라는 전제에서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목소리들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내용점검과 그 내용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년의 13시간으로 성교육이 가능한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지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확보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¹⁰⁾. 그렇다고 어떤 과목을 지목하거나

보건시간을 활용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도 문제다. 성과 몸의 문제는 생리나 보건 관점 이상으로 윤리, 철학, 문화, 사회학, 인문학 등을 융합시킨 넓은 의미의 건강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한 성인지적 정책을 의미하며 정책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성교육이 넓게는 여성정책이기는 하나,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위한' 보호정책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 결과 여성정책 중의 성교육정책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성폭력 등의 피해의 극복, 해결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기준이 남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성과 청소년에 대한 지배규범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남성과 같은 수준이거나 남성과 다른 특수한 집단에 대한 보호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이 정치적인 의미가 배제된 상태로 단지 생물학적인 양성의 숫자적 균형문제를 맞추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로 청소년정책이 이관되기 전 청소년을 위한 학교성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더불어 청소년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전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¹¹⁾의 역할로 변화한다. 1999년 국무조정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주축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어른들은 왜곡된 성문화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는 2000년 청소년·여성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 대표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표현된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 및 건전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

지 않다.

11)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로 2005년 4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 청소년위원회로 확대·개편했으며,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개칭했다.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됐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 산하로 바뀌었다

10) 교사성교육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는 지식과 정보차원의 자료들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성교육의 철학이나 방향은 제시되어 있

상으로 하기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범죄를 하는 어른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법률 집행 및 정책 개발의 근거가 된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 운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 재활, 청소년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성문화 개선사업 등은 성교육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그간 육성과 보호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분화 되었던 국가의 청소년 집행기구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보호정책을 넘어 청소년의 주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 비전인 “청소년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¹²⁾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성의 영역에 있어서 역량강화는 전국 16개 시·도에 건전성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교육시설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결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교육 체험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성교육효과를 제고시킨다는 목적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그렇다면 청소년보호정책이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변화한다면 구체적인 세부실행의지와 내용은 무엇인가? 특히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성교육 체험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민간이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문제와 연관되며 이는 다시 정부부처의 청소년 성교육 지향목표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법¹³⁾에 의거하여 육성, 보호’ 중심에서 ‘성

장, 참여,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와 향후정책계획에서 적극적·주체적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표방했다. 이는 정책의 주요한 핵심어인 차별해소, 복지, 찾아가는 서비스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청소년 참여·권리 증진 및 정책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어른들이 전제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보다 그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을 중심으로 다시 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은 2008년 보건복지부로,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현재는 성폭력예방 등의 성교육이 강화되어 성인지적 인권 통합교육이 개발되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을 성적존재로 인정하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포괄적·통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다양한 문화, 체험, 교류활동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 확대, 청소년이 행복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청소년의(성적인) 삶에 녹여낼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 어른들의 인식과 청소년의 현실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여 성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어른의 청소년 가해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적 보호와 참여의 조화는 계속 고민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법, 예산, 시스템 등의 정책들이 사회의 지향이념과 청소년/여성/사회운동 등에 따라 결합하면서 유동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주변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진정으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무엇인지 그 현황과 실태를 통해 고안해야 한다.

12) 2007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 연두 업무계획 참고

13) 청소년 관련법들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스카우트 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참여하고 체험하는 청소년 '권리'정책

1990년 대 말부터 학교 성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강화되었지만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통해 얻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성교육정책과 그들의 현실과의 차이가 지적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적 실태에 대한 다양한 호소들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 사회단체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했다.

1983년 서울 YMCA는 성교육상담실을 개설하여 청소년대상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성교육전문상담원교실, 교사강습회, 1년회 성교육캠페인을 전개해 오던 중 2001년부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www.ahacenter.or.kr). 1983년 가족계획협회(현인구보건복지협회)는 청소년성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성교육전문가양성과정, 성교육 시청각교재 개발 보급 등을 실시해왔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제정과 더불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서는 성폭력상담원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1995년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는 상담소운동, 탁틴맘운동 등 성교육을 중요한 장으로 펼쳐놓았다(www.tacteen.net).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결국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며 국가정책의 하나로 입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시의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정책으로 “성(sexuality)”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립성문화센터¹⁴⁾ 개설은 새로운 성교육의 정책모델이다. 이 기관은 민·관 협력 모델로서 시설과 재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내용적인 면을 민간이 제공하는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성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의 생물학적인 지식정보차원이 아닌 전시형, 체험

형 교육으로 시설을 꾸미고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Lee, 2013). 비슷한 맥락에서 2001년 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의 성교육전시관 설치와 2002년 성교육 모형 등 설치물을 탑재한 성교육 전용버스를 마련, 2002년에는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성교육장 마련(www.1318.seoul.go.kr) 등은 1990년대의 성교육과 비교하여 분명 차별성을 갖는다.

가장 큰 차이는 성을 공론화하여 청소년들과 직접 만남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일상이며 현장이라는 사실은 성에 대한 그 간의 호기심을 감소시키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궁금증,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공간은 성교육의 중요 학습장이 된다. 뿐 만 아니라 성교육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성교육의 의미, 방법교육과 함께 성교육 강사비 지원과 강사연결 등¹⁵⁾은 재량학습시간의 교사충원문제를 고민하는 일선의 학교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서 다양한 성적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 성교육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기관의 ‘체험형 프로그램’은 경험적으로 학교교사 및 청소년당사자, 청소년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입시중심의 학교교육과정에서 극소수의 청소년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학교 밖의 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일부 적극적이거나 성교육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학생들이나 탈학교 학생들이 교육의 참여자가 되면서 소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장소, 시설의 협소함 등의 구조적인 문제, 그

14)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1999년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우성 센터로 개설을 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로 YMCA가 운영해 오고 있다.

15) 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센터는 2000년대 중반 ‘심대여성에게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체험하다’는 이름아래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에 제공했다. 심대의 성적 의사결정능력과 성평등의식 향상 교육, 성교육 담당교사와 진행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과정 ‘중등 성교육 심화과정’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관점과 내용은 다르다.

리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경험 차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의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특히 더 심각하게 성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¹⁶⁾, 방법, 내용 등의 의미구성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의미의 성과 주체성에 대한 이해는, 위험한 성 보호와 비가시화 된 통제정책에서 체험중심의 권리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문제를 노정한다. 전시, 체험교육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덜어주는 하나 여전히 성을 고정된 지식으로 신체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성정치를 비판적으로 배우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들고 통제, 결정할 수 있는 세력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아하! 성문화센터>에서 보여지는 청소년은 하나의 성적 인격체로서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모든 청소년에게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시간이나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당당할 권리를 가지고 자신과 남을 사랑하여야 한다. 상징적으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교육받을 권리¹⁷⁾와 보호받을 권리¹⁸⁾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상의 체험형 교육¹⁹⁾으로는 가

능하지 않다. 이상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한 교육은 다른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이라는 성교육의 목표아래 청소년의 삶을 고려한 체험형 성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된다. 동시에 현재의 청소년들의 성적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청소년과 어른과의 관계설정도 주요한 고민과제이다. 권리에 해당되는 책임은 누가 지며, 보호받을 권리와 성을 누릴 권리가 상충되면 어떠한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질문 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정'을 위한 성교육 정책 방향

1. 맞춤 교육: 소통을 위한 건강한 관계 구성

청소년은 누구인가? 청소년기는 연령대로는 십대²⁰⁾를 상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십대라는 범주는 정치적, 역사적인 것으로 다양한 관점의 경합이 존재한다. 다양한 관점의 차이는 또한 그/그녀들의 삶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특정한 연령에 기반 해 있는 인구 층을 나타내는 기술적 범주, 즉 십대'라는 생애주기 혹은 인구의 특정 범주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비역사적 범주라기 보다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정치적 범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Byun/Min,

16) 청소년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적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성적자기결정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성적주체로서 자기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17) 청소년은 책임 있는 성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성적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준비가 되었을 때 성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개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경험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남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건강한 성문화 관련 모임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18) 청소년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신체적 또는 성적인 접촉도 NO! 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은 상대와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어떤 단계에서도 그만둘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음란물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상업적 성문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9)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단인 성문화 분과위에서 체험형성교육 사업시행 권의(2006년 7월) 이후 3개 민간단체 전문가 TTF팀의 결과가 프로그램으로 명시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www.youth.go.kr). 청소년건강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에 따른 내용들이 체험형성교육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최근 버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물론 단체들간의 차이가 있으리라 가정한다.

20) 한국에서의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항상 십대만은 아니다. 청소년을 관리하는 법체계에 따라 십대를 넘어서서는 자들도 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까지이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까지가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2007)고 전제한다²¹⁾.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Choi, 1999)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구성하는 범주에 대해 이해(理解)는 청소년의 욕망, 이해(利害)관계, 지배규범과의 저항지점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분석으로 가능하다. 역으로 청소년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사회의 금지(규제와 보호)를 알아 이 사회와 청소년의 관계를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Honneth (1992)에 의하면 주체의 법적인 인정을 위해 존중되어야 할 부분은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추상적 능력 뿐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사회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구체적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참여권에 대한 법적보장,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최소한의 문화 사회교육과 경제적 인정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는 청소년의 위치는 어디이며, 이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법적으로 ‘미성년(만 19세 미만)으로서의 성인준비기’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가?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으로서 성관계는 유보해야 하는가? 성관계는 성인의 특권인가? 청소년이 성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청소년들은(제도 미비로 인해)보호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른 이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녔으며 이미 그 이상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성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그들의 위치는 애매모호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인 실천을 하고 있지만(어른의 입장에서)인정하기도 그렇다고 그들을 보호하기도 어렵다. 또 모든 청소년이 성적인 실천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이다. 성적인 실천을 전제로 정책을 만들 것인지 아니

면 그 반대인지, 각 개인들의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제부터 혼란이다. 혹 성적인 실천을 전제로 교육했다가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성행위를 할 것도 걱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성적실천에 대한 관점 뿐 아니라 동시에 성적 관계를 위한 자존감 수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위와 내용에 대한 합의는 사회적으로 (불)인정하는 청소년의 성적 가치, 권리, 책임 등의 내용과 범위를 가시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법(통념, 가치, 문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동의’의 나이는 어떤 지점에서는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성별(민법에 의해 남자 만 18세 여 만 16세)에 따라 다르거나 대학생이라 할지라도(만 나이의 차이에 의해)유흥업소에 갈 수 없기도 하다. 또 성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행위의 의미는 다르게 부여된다. 어떤 사람과 청소년과의 성행위는 나이 14세 미만 여부에 의해 그 이하이면 동의여부와 관계없는 의제강간이 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는)은(는) (맞가름을 바란 교제라 할지라도) 성매매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즉 14세 미만의 아동과는 성행위 불가이며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매매, 폭력 등은 불법이며 동의여부에 의해 성관계와 피해가 구분되기는 하지만 동의여부에 대한 논쟁은 힘들다. 17세 청소년과 동의한 성관계가 할지라도 그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판단이 어렵다. 만약 대가성이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으나 폭력성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청소년은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혹 상대방과 사랑했다할지라도 미성년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은 부모에게 있다)²²⁾. 여기서 청소년의 의지나 맥락을 분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성적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만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만 6년 동안의 청소년들은 무성적 존재로서 간주되며 여성청소년의 경우 결과(미혼모, 성매매피해자, 성폭력피해자)만 있

21) 서구의 여성주의 문화연구자는 심대의 범주를 구성하는 사회적 원리로서 ‘젠더’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에서도 특별히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특정 연령을 관할하는 사회적 원리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으로 통일했다. 앞으로 젠더를 강조하기 위해 청소년과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거나 청소년을 남성만을 대표하는 범주가 아닌 사회문화적 범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22) 국가에 따라서 성행위를 한 자들간의 연령차가 적을 경우, 위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1995년 이탈리아에서는 13-16세간의 청소년당사자간의 성행위가 합법화되었다.

을 뿐 이다. 또 14세 이상의 남성가해 청소년의 경우,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보다 문제, 탈선, 충동의 폭력가해 행위를 한 것이다.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보다 특수한 행위로 의미화 되어 그 처벌(보호관찰, 벌금형, 선도보호, 소년원 등)에 집중한다.

물론 혼전성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이전보다 더 관대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법적인 의미보다 문화적인 통념에 의해 청소년의 성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 부모의 동의에 의해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원조교제를 하기도 하고 친밀한 성관계를 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은 부재하며 ‘보호’의 법 제도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교육 정책은 ‘청소년의 6년 기간’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성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10대의 청소년들의 임신은 피해야 하니 피임 교육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임교육이 갖는 의미를 교육해야 한다. 또 성관계와 나이 규정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성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성관계 허용/실천의 주체성 확보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각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성적 독립성의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과의 경험나누기 등의 목소리내기/듣기이다²³⁾.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들의 욕망과 이 사회체계와의 차이-성관계에 대한 불가, 유보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알고 그들의 현실에 대한 각각의 이해관계의 정치학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의 여정과 결정이 제도에 의해 결정되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의 근거와 결정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성교육이다. 이러한 준비는 주어진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방법들 안에서 성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의 경합을 둘러싼 문제들에 직면, 저항, 협상 할 수 있으며 사회와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강증진방법이다.

특히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어떻게 성교육의 내용에 개입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정생물학의 요소를 기준으로 인간을 나눈 기준이 남녀로서, 남녀라는 구분자체가 하나의 사회제도라면 여성청소년은 나이와 젠더라는 사회기준이 개입된 특수한 범주이다. 젠더는 성별을 권력관계로 동원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원리와 질서로서 계급 등 다른 사회적 구성 원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젠더관점에 대해 감수성을 갖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이중, 삼중의 중층적 여성억압의 경험에 대한 가시화를 넘어서 성별범주를 이해하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남성이 이미 거기에 있는 통일된 본질적 범주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관계 맥락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즉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할 수 있는 몸인데도 성관계시 왜 능동적으로 피임할 수 없는지를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이 사회에서) 미혼여성의 임신이 왜 위험한지를 성교육의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나이, 섹슈얼리티, 계급 등의 사회적 권력관계가 성별 권력관계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내는 여성청소년(청소년)들의 차이, 유사성, 분업, 연대의 다양함이 탐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무화된 성폭력 예방과 근절교육은 성폭력과 이 사회의 젠더시스템을 연결하여(청소년들 언어로) 교육할 수 있다. 성폭력은 생물학적 남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이 매개된 남성성의 문제이다. 의도하지 않은 남성들의 관습화된 남성성을 문제화하는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다. 젠더체계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적 권리 등

23) 충북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성문화포대지기 멤버들이 성교육교사강습회 활동가로 참여하거나 성이야기 작품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심대들의 작품들이 간혹 성교육 교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성정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만남은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지자체, 위탁단체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하고 체험해야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성관련 문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남성들의 변화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성폭력과 남성성, 여성성의 작동원리를 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젠더시스템으로 인한 성차(sexual differences)가 만들어지게 된 그 역사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몸들의 의미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일 때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한 성교육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다. 구조적인 '효과'로서 젠더의 작동방식, 그 안에서 여/남성으로 살기 위해서 체화하는 다양한 관습, 이념, 실천양식 등을 해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젠더, 계층/계급, 나이, 외모, 성적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차이를 분석하여 각각의 위치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나이, 젠더, 계급/계층 등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특수하게 구성된 역사적 범주로서의 청소년의 맥락을 해석하고 동시에 교육하는 자들의 위치에 대한 점점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한 '맞춤교육'은 진정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럼에도 현실이 어떠한지를 서로 소통하여 청소년과 그들과 관계하는 어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2. 세력화 교육: 다양한 권리 협상과 성적시민성 고안

앞 장에서는 청소년이 자신과 사회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맞춤교육으로서 성교육을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는 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적인 것(the sexual)'의 의미는 세대(나이), 성별, 계급/계층, 성적체성 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제 현실과 도덕과 윤리 규범

등의 이념과의 차이도 크다. 공사영역과 성별에 따라 이중적인 체계도 작동한다. 공적영역에서 청소년은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재현되지만 사적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예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역으로 '성적인 것'의 의미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성교육의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성관계의 실행경험, 성폭력의 가피해현황, 성적인 따돌림, 임신/피임경험, 성적인 환상과 대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서로 교육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의 성적인 것의 의미와 실행 분석을 통해 결국 그들이 '욕망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당하는 것'의 차이들에 대한 해석을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 욕망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금지를 통해 지향하는 바는 '어른이 바라보는 청소년의 미래'를 말한다. 이때 현재와 미래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개념적이고 이념적인 의미로 누구의 관점인지의 문제이다. 분명 현재의 어른들은 (청소년에게)지향하는 바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청소년의 미래라고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지향으로만 그 미래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의 성적 실천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사회에서의 새로운 청소년들의 모습이 기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파악을 통해 가능하며 사회와 자기의 구체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향을 '성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남성중심, 이성애중심, 어른 중심, 성적 권리 중심 '이상(beyond)'의 의미로서의 성적 시민성 개념은 이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들을 '상대화'할 수 있으며 결국 청소년들을 '세력화'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성적시민교육을 성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를 전제해야 청소년 성교육의 현재의 문제들이 많은 부분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남성정체성의 본질적인 전제아래 기존의 성의 범주가 종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Mouffe (1992), 이성애자들보다 '순수한 관계'의 원리에 더 가까운 새로운 관계를 구상하는 Giddens (1992)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성적 형태인 이성애와 서로 다른 섹슈얼리티²⁴⁾ 사이의 연관에 대해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지향으로서의 성적 시민은 나이와 젠더에 의해 본질화된 청소년의 보호, 지원으로 현재의 애매모호한 청소년의 현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체, 재구성을 요청한다. 특히 Weeks (1998)는 보편적 정의로서 성적 시민을 주창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요구들과 공동의 목적을 구성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위해 공통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함께 살기를 배울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의(현재) 남성, 여성, 청소년, 아이, 성인, 장애인 등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또 성적으로 보호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성적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보호'와 '권리'를 이분화하여 양자택일하거나, 아니면 보호에 추가하여 권리를 제안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의 청소년이 성인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성인의 성적권리만 제시하면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시민을 전제로 성교육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강제하는 특성으로서의 성규범에서 벗어나, 개개인들이 자기 성찰과 관리를 통해 자기실현과 자존감의 방법을 만들 수 있으며 공동체와 협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구성(White and Hunt, 2000)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적 시민성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정체성 구성을 통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가능성 교육이며, 자기 성찰교육

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사회인정의 틈새에서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를 배우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건강한 삶이다.

그렇다면 성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청소년의 성교육은 어떤 권리(책임)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특히 전지와 체험이라는 성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성적 시민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기존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성적참여에 대한 능동성,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리 협상교육이다.

Richardson (2002)은 성적 권리 자체가 논쟁적이라며 성적시민성과 관련하여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행위에 기초한 권리(conduct-based rights)는 개인적 관계에서 다양한 성적 실천을 위한 권리 추구로 성적 자유와 안전을 위한 캠페인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성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설명없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면 기존의 성별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 기술가정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나 성관계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피임방법도 위험하다. 성행위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어는 성적 쾌락²⁵⁾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쾌락의 영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성폭력, 낙태, 피임, AIDS에 대한 위험공지나, 금지 교육을 통해 위험의 섹슈얼리티 교육이 실행된다. 즉 원치 않는 임신방지교육은 있으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민간의 체험교육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을 다루지 않는다. 권력관계의 실천으로서의 성에 접근하기보다 본래 주어져 있는 성적 권리와 책임을 다시 탈환하거나 없는 권리를 갖겠다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도덕주의, 합리주

24) 다양한 젠더와 성적 차이에 기반 한 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Evans(1993)는 레즈비언 시민권이 여성의 성적 시민권 내에서도, 동성애자의 시민권 내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레즈비언과 게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레즈비언과 게이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차이들을 분석하지 않으며, 레즈비언은 게이 범주의 하부에 속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성인의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문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

25) 60년대 성해방 담론이 남성쾌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쾌락은 부정되었다는 70년대 여성주의자들의 비판들과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적 만족감을 둘러싼 좀 더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며, 이는 성해방과 여성해방 사이의 긴장을 야기하였다. 서구의 성의 역사화과정과 함께 한국의 성의 역사과정 들은 청소년의 성정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교육내용들이다.

의를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기 통제와 안전교육은 단순히 성적 보호를 넘어 사회적 권리들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건강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적인 존재를 인정하여 성적인 실천이 일반적으로 행해져(상대방에게) 폭력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는 남성성변화교육이며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자기표현교육이다.

둘째, 정체성에 기초한 권리 주장(identity-based rights claims)은 자기 정의와 개인의 정체성 발달을 위한 권리를 위해 다양한 성적정체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70~80년대 성적 권리 담론의 초점이 성적 실천에서 성 정체성으로 옮겨가 성적 실천과 연관된 권리들이 이성애/동성애 구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성상담창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팬픽, 야오이, 팬덤현상 등이 있지만 공식교육 정책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여성사회단체에서 성상담원교육의 하나로써 레즈비언/게이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성교육강사에게 어려운 주제일 뿐이다. 최근 공식적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위해 동성애상담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영상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성적 실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기 정의와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자기 정의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유로 제한되며 상담의 창구에서만 드러나는 비밀이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는 개의치 않겠으나 공적 공간에서는 드러내면 안 되는 동성애 및 포르노는 금지된다. 또 엑스존 사건(2001)²⁶⁾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포르노는 유해상황으로 금지된다. 그러므로 사적 공간에서 조차 특정한 성적 실천 즉 이성애를 정상, 자연, 규범으로 전제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자기실현의 욕구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여 정체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또한 소비를 통해 표현되는 정체성은 돈이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다. 청소년들은 성을 사고 파는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대가를 기대하면서 몸을 교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적인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관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의미-외모지상주의, 다이어트, 소비주의, 왕따 문화, 더 나아가 저항과 성장 등으로 성매매현상을 분석해서 그 과정이 자신과 사회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여 선택과 책임을 지게 할수 없다. 성교육은 선악의 가치주입교육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선/악이 되는 '과정', 성이 교환되는 과정을 교육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셋째, 관계에 기초한 권리 주장(relationship based rights claims)은 사회적 제도 내에서의 다양한 성관계를 (안)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정을 추구한다.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때로는 가지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인정을 주장한다. 청소년 성교육에서는 성적권리가 왜 관계 중심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떠한 위험과 쾌락을 내포하는지는 가시화하지 않는다.²⁷⁾ 관계는 이미 에로틱하고 쾌락적인 것 뿐 아니라 고통, 폭력, 치유 등을 포함한다. 소위 행위중심의 관계는 다양한 관계 중의 하나일 뿐으로 때로는 큰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교육에 있어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결과 등을 실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는 의지나 저항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나이와 젠더라는 사회적 시

26) 게이사이트 엑스존 운영자가 정보통신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마크 표시강제에 항의하며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고 소송까지 진행했던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동성애조항을 삭제권고하고 정보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말이 난다. 이 사건은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한 투쟁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27) 대표적으로 인종 간 성적 결합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백인 우월주의, 나치의 인종주의, 또한 미국의 식민주의와 노예제 맥락에서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노예와의 관계 맥락과 흑인 남성 노예와 백인 여성과의 관계를 보면, 성적 시민권이 이성애중심주의, 젠더화된 성적 실천뿐만 아니라 인종적 구성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레즈비언과 게이의 권리 운동도 결혼과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법적 이익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이주, 연금, 상속, 친족 구성, 세금에 대한 권리들)주장이나 동성간의 결혼을 승인하는 사회에서 조차 이러한 사회적 법적 이익에 대한 권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나 입양과 부모 됨의 권리는 강한 저항을 받는다. 그러므로 권리주장으로서의 저항을 통한 인정은 한계가 있다.

시스템에 의해 구분되며 나이, 젠더에 따른 관계양식에 대한 사회적 규범, 가치, 행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사회구조자체, 성별/인간관계 그 자체를 문제화할 수 있다.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기도 하다. 청소년으로서의 성규범을 체화하기도 하며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성적존재로 인정하기 위한 성적 권리는 안전, 쾌락, 성적 행위와 파트너 결정권, 성적 주체에 대한 동일한 사회적 승인, 성적 상품에 대한 소비의 권리, 소통과 관계 등 다양하게 토론되어 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존중되고 인정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의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이 글은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중요한 정책의 내용으로 강조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특히 어른이 가정하는 청소년을 모델로 그들에게 성규범과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 어른이 전제하는/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욕망과 성장을 인정하여 어른과 청소년의 관계를 구성하는 연령, 성별(젠더) 규범, 섹슈얼리티 등을 건강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성적권리 교육을 제안한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 사회, 더 나아가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이다. 다양한 성적권리와 관계 교육이 어떠한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또 성적권리와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그럼에도 왜 그러한 지원이 힘든지를 성적 시민으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했다. 따라서 이 글은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일상적인 성관계, 성행위 등의 지식과 정보, 체험을 통한 (앞으로의 성인)준비교육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성적 시민성(sexual citizenship) 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개인의 성적 권리

주장 이상의 성적 시민성 교육은 제도적인 지원과 담론의 정치를 통한 성적 존재로의 청소년 인정이 필요조건이며 청소년의 맥락을 이해하는 맞춤형교육만이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의 만남을 시작하여 세력화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스스로 일상의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앞으로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이란 ‘그대로’ 지식과 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지식도 본질적이지 않으며 특히 성에 관한 것은 언제나 사회 맥락적이다.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들에게 나와 너를 둘러싼 사회맥락을 알려 주는 것이 성교육의 시작이다. 교육은 ‘가르쳐서(敎) 성장한다(育)’는 의미처럼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협상을 위한 가능한 방법들, 대안들을 가르쳐주고(敎)하고 건강하게 크는 것(育)이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들의 다양한 관계-차이를 이해하며 이제까지 당연했던 기존의 관념, 윤리, 가치체계, 제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알면서 새로운 의제를 통해 당연한 것을 해체,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밖과의 싸움뿐 아니라 내부의 힘을 기르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성장이다. 또한 이것이 현재를 살아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健康) 개념이다. 특히 성교육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건강한 시민교육으로, 젠더, 나이, 계급/계층의 의미를 새로 만드는 협상과정이다. 또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제도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정이다. 또 몸과 성, 그리고 사랑 등의 관계도 권력관계이며 대안가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를 실험하게 하는 세력화(empowerment)과정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성교육정책은 대안가치를 생산하는 행복한 건강실천과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Byun Hea Joung, Min Ga Young (2007), "A study for

- exploring the meaning of girls' runaway in terms of gender and clas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23, No.1.
- Ahn Myoung Ock(2013), "Women's lifetime health &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the Perspective of Women's life cycle ", 『Sourcebook of 84th Women Policy Forum to promote Government Administration Assignment and 34th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Conference Autumn Symposium』
- Oh Jae Rim (2005), "Methodological exploration for Youth Sexual Education – based on Aha! Sexuality Experience program", 『Aha! Sexual Education Report Vol.1』
- Lee Myoung Hwa (2013), "current status of sexual education for Youth sexual culture and youth Sexual Culture Centre", 『Seek a role of and development plans for Korean Youth Sexual Culture Centre』. Sourcebook from Chung-Ju Women call centre affiliated with ChungBook Movable Youth Sexual Education Centre.
- Lee Sang Won et, al. (2005), 『Plan research for vitalizing Women educational policies of Federal Educational Self-governing body』, KWDI
- Choi Yun Jin (1999), "A Study on the Cases against Arbitrary Limitation on Youth Right", 『Studies on Korean Youth』, 1999.Vol.10 No.1 pp5-23
- Evans, David T (1993), Sexual Citizenship, London : Routledge
- Honneth, Axel (1992), "Recognition Struggle", Moon Sung Hoon and Lee Hyun Jae (trans), Seoul : The Books of April, 2011
- Mishra, Lamesh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Lee Hyuk Gu et, al. (trans), Seoul : Soug Gyun Khan Uni, 2002
- Mouffe, Chantal (1992),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tic Politics", In J. Butler and Joan Scott, 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 Routledge
- Richardson, Diane (2002), Claiming Citizenship? Sexuality, Citizenship and Feminism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Brisbane, Australia
- Weeks, Jeffrey (1998), "The Sexual Citizen",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5, No. 3. pp 35-52
- White, Melanie and Alan, Hunt (2000), "Citizenship : Care of Self, Character and Personality", Citizenship Studies, 4
- www.ahacenter.or.kr
- www.edugender.or.kr
- www.moe.go.kr
- www.mof.go.kr
- www.mow.go.kr
- www.sisters.or.kr
- www.woman.seoul.go.kr
- www.tacteen.net